

“단말기 탕”... 3월 5G 상용화 실패 핑계대는 정통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통신안전 점검 대상 D급까지 확대 2022년까지 4차산업 인재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이달 계획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단말기 출시 지연 등의 영향으로 늦춰진다.

과기정통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단말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5G를 상용화 할 것이다. 3월 말 상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공용했던 2019



문미옥 과기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년 3월 5G 상용화가 무산된 셈이다.

그는 이어 "상용화 단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토록 제조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 5G 최초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5G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기로 결정했다. 요금제

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 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배 실장은 "5G 요금제 인가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서비스에 5G 인프라를 접목하는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장비 등 전략 분야와 품목을 선정해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드러난 부실한 통신안전도 챙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20조원을 들인 정부 R&D 예산은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AI, 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 양자컴퓨팅 기술 및 지능형반도체와 같은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치매환자 간병 보조 로봇, 공공와이파이 약 2만개 구축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상장사 주총 키워드 '정중동'... AI·VR·블록체인은 '실종'

신규사업 예정기업, 사업 내재화 준비 재계, M&A·대규모 투자로 고도화

3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 본 주요 상장사의 올해 키워드는 '정중동(靜中動)'으로 요약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과 로봇, 블록체인사업 등 미래 먹거리 만들기엔 적극적이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A그룹 고위 관계자는 7일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여기에 '스튜어디스 코드'라는 보이지 않는 창이 기업의 투자욕을 꺾고 있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급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다"고 전했다.

◆사업 내재화·다각화 통한 수익성 증대

7일 메트로경제가 유가증권상장사 553곳이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2월1일~3월 6일)를 분석한 결과 73개 기업이 신규사업 또는 사업다각화 계획을 밝혔다.

신규사업을 밝힌 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하나투어는 보험대리점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올렸다. 최근 해외여행객 사이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판매를 통해 새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한샘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수요는 늘고 있다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렌탈임대업', '청소, 수리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27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 '일반음식점' 사업목적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개장을 앞두고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정관의 사업 목적에 '포장시험·연구·서비스업'을 신설했다. 자동차 부품용 해외법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포장하는 기술 등을 연구하고,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온라인 중고차 거래 관련 일체의 사업'을 추가했다. 현대글로벌

<코스피 상장사 주총안건 내용>

기업	신규 사업 내용	사유
롯데칠성음료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사업 추가
롯데케미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처리사업 영위(관련 면허 취득 등)를 위하여 정관상 목적사업 추가	수처리사업 영위(관련 면허 취득 등)를 위하여 정관상 목적사업 추가
한국타이어	고무제품 렌탈임대업,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이에 부대되는 서비스업	타이어렌탈업 신규진출관련 목적사업 추가
한국가스공사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에 따른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추가
롯데하이마트	수출입업, 해외구매대행업, 식음료제조업, 식음료판매업, 다류판매업, 식품판매업, 농수축산물 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여행업, 관광여행알선업, 태양광발전업, 전기공사업, 각종오락장,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기타서비스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신규사업추가
현대홈쇼핑	자동차판매업	신규사업추가
셀트리온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자문 및 유지보수업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사업진행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LG유플러스	에너지지단, 에너지기술, 에너지안전관리,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사업 및 기계설비사업	신규사업추가
GS건설	온실 및 부대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설치, 운영 및 농작물의 생산, 유통, 스마트팜(Smart farm) 설치 운영	신규사업추가
제주항공	일반음식점	신규사업추가
현대글로벌비스	포장시험·연구·서비스업, 온라인 중고차 거래 관련 일체의 사업	신규사업추가
LS산전	스마트 공장 솔루션 자문,중개 및 유지보수업, 한국형 스마트 공장 플랫폼 사업 추진 추진	신규사업추가

스는 경기도 분당, 시화, 경남 양산 등 3곳에서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판매 물건의 다각화를 위한 정관변경안이 주를 이뤘다.

먼저 현대홈쇼핑은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자동차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보험감독 규정 개정으로 홈쇼핑은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까지 판매할 수 있게 돼서다.

LF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방용품, 전기·전자용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온라인 쇼핑몰인 LF몰이 패션을 넘어 토스터기, 에어프라이어기 등 소형가전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여행업, 관광여행알선업 등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고, 광주시세계는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신규사업에 추가했다.

씨티은행은 "한국의 2월 수출 데이터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향후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꼭 닮아 있다. 무디스는 지난 4일 "투자사 이를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감축이 경제 모멘텀을 해쳤다"며 "또 중국의 중간제품 수요 둔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 침체는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은 2.2%로 낮췄다.

◆삼성·현대차·SK·한화 등 대기업은 길 길 간다

재계는 장기계획 아래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를 통한 핵심산업의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AI·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2021년까지 총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NXP, 자일링스, 인피니언 등의 인수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개발과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2023년까지 5년간 45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9조원 이상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3월 주총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경우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게 올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룹을 진두지휘하게 될 정 수석 부회장이 단기 투기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성장에 집중할 것이란 게 재계의 관측이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과 SK하이닉스는 용인에 큰 투자(120조)를 약속했다. SK그룹은 또 향후 5년간 5대 중점 육성분야에 총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그룹의 핵심인 LG전자는 사업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료전지 자회사를 청산하기로 한 데 이어, 수(水)처리 관리·운영 자회사와 환경시설 설계·시공회사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전자장비(VC),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지난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취임과 함께 공격적인 M&A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경영복귀에 내심 기대를 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향후 5년간 총 22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3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이 복귀하면 M&A 등도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금감원

대출 원리금상환액

직접 조회 시스템 구축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지난 2017년 8~12월 ▲금융감독 검사제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3대 혁신TF를 운영해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까지 3대 혁신TF의 세부과제는 총 177개로 이 가운데 121개(68.4%)는 이행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남은 과제 이행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부분별로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의 44개 과제 중 37개가 이행 완료됐다. 보험회사가 판매상품의 약관과 안내자료 등을 자율시정하는 자율감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잔여 세부과제 7개도 모두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65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29개 과제가 이행됐다. 미스터리 쇼핑의 회사별 결과 공개,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시행, 은행권 '고객 알리미 서비스' 도입, 대부분제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다. 올해 중 25건의 과제를 추가 이행하고 나머지 11건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68개 과제 중에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주시거대내역 점검, 조직구성간 상생방안 등 55개 과제가 완료됐다. 올해 중 12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